

#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

**양평섭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국팀 연구위원  
psyang@kiep.go.kr

**나수엽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국팀 전문연구원  
syna@kiep.go.kr

**남수중** 공주대학교 교수  
sjnam@kongju.ac.kr

**이상훈**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연구위원  
jinnoli2@hanmail.net

**이혁구** 배재대학교 교수  
leehk@pcu.ac.kr

**유호림** 강남대학교 교수  
tigerwoods@kangnam.ac.kr

**장영석** 성공회대학교 교수  
jys80@skhu.ac.kr

**조현준** 건국대학교 교수  
hjzion@konkuk.ac.kr

**최의현** 영남대학교 교수  
yxcui@ynu.ac.kr

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중국은 1978년 개혁·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화 개혁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음.
  - 그 결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외자유치 촉진, 이중환율제 폐지, 경상거래 자유화, 국유기업 개혁 추진 등과 같은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졌음.
- 2000년대 들어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된 가운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음.
  -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두었으며, 중국경제의 국제적인 위상도 급속히 제고됨.
-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성장방식의 불균형(투자-소비, 수출-내수), 에너지 부족과 환경 파괴, 지역간 발전 격차 및 계층간 불균형 확대,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약화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.
  - 이들은 단기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위협할만한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.
-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장기 국가 발전 전략 중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한편, 이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을 핵심 정책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.
  -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,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, 개혁·개방 심화를 강조함.
  - 특히 중국 신지도부는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3차 중앙위원 전체회의(이하 제18기 3중 전회)에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개혁 방향을 제시함.
- 이러한 경제개혁 추진 방향에 따른 중국의 경제정책 및 환경변화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대중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.
  - 따라서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중국정부가 시행한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·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.
  - 이를 통해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중국의 경제 환경 및 대중 진출 여건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, 기업의 대중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-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·재정·세제·국유기업·시장·가격·노동 및 호적·대외경제 등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, 제18기 3중 전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개혁 방향도 제시함.

### 1) 금융 개혁 과제

- 중국정부는 자유화·국제화·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.
  -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정상화
  -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환경 개선
  - 단계적 금리 자유화 추진
  - 환율 자유화 및 외환 규제 완화
  - 금융리스크 대응·금융감독 시스템 선진화

### 2) 재정 개혁 과제

-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바, 분세제의 시행으로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된 반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유지가 어렵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됨.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조세분배율 조정, 부동산세 징수 등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능력을 강화해야 함.

- 이와 같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 문제는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,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.
  - 지방정부 재정 문제로 도시화의 진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,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.
  -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.

### 3) 세제 개혁 과제

- 중국은 소득불균형, 조세부담의 불공평, 글로벌 불균형 문제(내수 확대) 등을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에 세제 개혁의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, 향후 세제 개편의 주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음.
  - 감세 조치 적극 추진
  -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 추진; 영업세를 완전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
  -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 추진
  -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 추진

### 4) 국유기업 개혁 과제

- 중국 신지도부는 제18기 3중 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시장 역할의 재정립, 혼합소유제 중시(공유제와 비공유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)를 강조하였으나,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는 발견되지 않음.
- 이에 따라 당분간 국유기업 개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신에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.
- 향후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나,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혹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표기업의 육성,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운영에 여전히 국유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  - 이를 고려해 볼 때 국내외 시장, 특히 전략적 업종과 영역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중대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
## 5) 시장 개혁 과제

- 개혁·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이행해 왔으나,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.
-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 조치의 하나는 반독점법의 제정으로, 향후 중장기적인 반독점 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.
  -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통일적 법집행을 시행해야 함.
  -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.
  -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,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의 포함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함.
- 유통체제 개혁은 지역간 유통 장벽을 해소하고,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, 민영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, 체인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망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,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.
  - 중기적으로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,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 추진
  - 도시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으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
  -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대형유통업체와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
  - 전자상거래 제도 활성화
  - 장기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, 농촌의 유통시스템 확립과 유통단계 축소,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

## 6) 가격 개혁 과제

- 중국 신지도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, 자원·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- 자원·에너지 가격 개혁
  -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‘연료비 연동제’를 실시할 계획임.
  -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의 실시 범위 확대

-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, 송배전가격은 정부가 결정할 방향
-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,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 확대 계획
- 국제유가의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 정비

#### ● 농산물 가격 개혁

- 중국정부의 농산물 가격통제정책(최저수매가격, 임시수매비축정책)은 시장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
- 일부 농산물 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음.
- 이에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-소비자시장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.

### 7) 노동 · 호적제도 개혁 과제

#### ● 중국 국무원은 「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」을 통해 민생 개선과 분배제도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함(2013년 2월).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음.

- 동부지역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동과 관련됨.
- 이미 노동시장이 ‘루이스 전환점’에 도달한데다 중국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가파른 임금 상승은 불가피함.
- 노동자의 ‘시장 교섭력’과 ‘현장 교섭력’ 제고로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.

#### ● 주요 도시의 실험적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호적제도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.

#### ● 호적제도 개혁에는 도농 주민간 및 관련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보다 발전된 개혁 방안이 나오기 힘들 전망임.

#### ●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매우 중요함.

- 재정투자의 확대,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론 확산 및 제도 확립 등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.

## 8) 대외경제 개혁 과제

-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발전 방식 전환, 주동적 개방전략, 적극적 통상·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.
  - 국내경제의 발전방식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수출과 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
  -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,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음.
  -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
-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핵심 과제로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,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, FTA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음.
- 중국은 개혁·개방 이후 4단계에 걸쳐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, 12.5 규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해외투자의 결합 발전을 강조함.
  -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 제한 대폭 완화,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의 실험을 시작하게 되나 중장기적 과제도 남아 있음.
- 위안화 국제화의 전제 요건인 자본계정 거래 및 환율 자유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점진적인 위안화 국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.
- 중국의 신지도부는 당분간 기존의 대외통상정책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.
  - 이에 미국 중심의 TPP에 대해서도 다소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, 과거와 달리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도 엿보임.
  - FTA 추진에서는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.

## 9)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

- 중국은 제18기 3중 전회를 통해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6대 중점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함(참고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).
  - 6대 중점 개혁방향: 기본경제체제의 완비, 현대적인 시장체제 정비의 가속화, 정부 직능의 전환, 재정과 세제 개혁의 심화,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,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

- 제18기 3중 전회에 나타난 경제 분야의 개혁 목표와 추진 방향, 주요 개혁 조치를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  -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,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임.
  - 금융 분야에서는 진입제한 완화, 금리 시장화, 자본시장 개혁,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음.
  - 재정 및 세제개혁에서는 분세제 이후 누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,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.
  - 가격개혁에서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,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  -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,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함.
  -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다양한 실험을 강조함.
  -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함.
  - 기타 경제 관련 제도 개혁으로 교육·취업·사회보장·의료 등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을 추진함.

### 3. 시사점 및 대응 방안

#### 1)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,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됨.
  -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된 경제개혁 방침에 의하면 중국 신지도부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 방향은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임.
  - 이로 인해 향후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1992년 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한국의 대중 교역 증가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,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증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.
  - 하나는 중국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둔화로 인한 영향이고, 다른 하나는 세계 경기 둔화가 중국의 수출 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임.

- 중국경제의 저속 성장기에도 중국 내 생산을 위해 필연적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,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.
  -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도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.

## 2)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

-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것임.

### ① 새로운 기회 요인의 활용

- 첫째,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갈 경우 제도의 투명성과 개방 수준이 제고됨으로써 불투명성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음.
  - 또한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지방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- 둘째, 중국시장 진입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.
  - 투자전 내국민대우 부여, 외국인투자 개방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방식 도입,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진입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대중국 투자진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.
  - 위안화 자본항목의 자유대환이 실현될 경우 중국 소재 우리 기업의 해외송금 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.
- 셋째,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임.
  - 환경과 에너지 절감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며, 국유기업의 소유구조 개혁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M&A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임.
  - ‘한 자녀 정책’의 수정에 따라 새로운 니치마켓이 형성됨으로써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음.
- 넷째, 대중국 투자 진출 지역 선정에 있어 중국의 자유무역구 실험은 물론 내륙과 변경지역 개방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.

## ②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

- 개혁에 따른 가장 큰 위협요인은 중국 내 투자기업의 경우 요소가격은 물론 관리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.
  - 특히 물·석유·천연가스·전력·교통·통신 등의 가격시장화는 자원가격과 공공요금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.
  -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보호세 도입은 기업의 환경 부담금 증가로 이어짐.
  - 토지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공업용지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됨.
  - 이밖에 소비자 권익 강화,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중국기업과의 경쟁 격화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이상의 위협요인은 대중국 진출 환경 변화를 의미하는바,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  - 무엇보다 중국 내 기업경영 관련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함.
  -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금상승, 사회보장비용, 환경 관련 비용, 자원·에너지 가격 상승, 토지가격 상승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함.
  - 따라서 향후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진출 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가격의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.

## 3) 한·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

-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.
  -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·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,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 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한·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음.
-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함.
  - 한·중 FTA 협상 진행 중 각자 민감분야의 보호만을 강조할 경우 결국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.
  - 따라서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협상이 필요함.

- 또한 한·중간 교역구조의 특성(중간재 중심의 교역구조),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, 중국의 수입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협상전략 수립이 시급함.
-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,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  - 이들과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를 통해 중·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(ECFA)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.
  - 이와 동시에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관세인하 추진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전환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.
-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함.
  -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 투자개방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, 투자 전 내국 민대우도 허용하고 있음.
  - 따라서 한·중 FTA 투자 협상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.
- 한·중 FTA 서비스 협상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.
  - 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협상은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으며, 서비스 산업은 FTA 체결 이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.
  - 따라서 한·중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 - 또한 중국의 CEPA, ECFA,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개방 내용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## 참고자료

### 1.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된 주요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

경제개혁 방향	주요 개혁 과제
기본방향	-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 발전 도모
재산권보호제도 완비	- 현대적 재산권제도 완비 - 공유제 및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 보호
기본경제제도 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유·집체·비공유 사이의 교차 지분보유를 통한 혼합소유제 허용</li> <li>- 국유 프로젝트에 비국유 자본 유치</li> <li>- 근로자의 자산주 보유</li> <li>- '국유자본운영공사': 국유자본의 授權 운영 체제 구축</li> <li>- 알맞은 국유기업은 '국유자본투자공사' 로 개조</li> <li>- 국유자본의 투자영역 설정: 국가전략·안전·국민경제·핵심산업</li> <li>- 국유자본수익금이 공공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30%로 제고 (현재 약 25%)</li> </ul>
국유기업의 현대적인 기업제도 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국유기업의 기능과 범주 명확화</li> <li>- 국유자본이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은 자연독점 산업</li> <li>- 회사법인 관리구조 구축: 전문경영인제도 도입, 회사 내부직원의 인사 및 임금제도 자유화, 재무·예산 정보 공개</li> <li>- 국유자본 경영투자 책임 추구</li> </ul>
비공유제의 건강한 발전 지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지원</li> <li>- 비공유자본이 통제하는 혼합소유제기업 발전 장려</li> </ul>
기본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·경쟁적 시장체계 건설</li> <li>-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작용 강화</li> </ul>
공평하고 투명한 시장규칙 건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된 시장진입제도 시행</li> <li>-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 도입</li> <li>- 공상등록제도(工商注册制度)의 간소화, 자본등록 전 등기 가능</li> <li>- 전국 통일시장 형성을 위한 장애물 해소</li> <li>- 지방 보호주의 배격</li> </ul>
현대시장체계 완비 가속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, 정부의 부당한 개입 축소</li> <li>- 물·석유·천연가스·전력·교통·전신 가격의 시장요소 도입</li> <li>- 정부의 가격결정은 공공사업, 공익서비스, 네트워크 효과의 자연 독점 분야에 국한</li> <li>- 농산품 가격 형성 시스템 완비</li> </ul>
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 건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촌집체 건설용지의 출양·임대·출자 허용, 국유토지와 동등 대우</li> <li>- 토지 징발범위 축소, 다양한 농민 보장 시스템 도입</li> <li>- 국유토지 유상사용범위 확대, 비공익성 토지 행정배당 축소</li> <li>- 국가, 단체, 개인을 모두 고려하는 토지가치 수익분배시스템 구축</li> </ul>
금융시장 체계 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산업 대내외 개방 확대: 민간자본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</li> <li>- 정책금융 조직개혁 추진</li> <li>- 주식 발행등록제도 개혁 추진</li> <li>- 채권시장 개발, 직접금융 비중 제고</li> <li>- 보험 보상시스템 완비, 재난 보험제도 구축</li> </ul>



경제개혁 방향		주요 개혁 과제
현대시장체계 완비 가속화	금융시장 체계 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민폐 환율시장화 시스템 완비, 금리시장화 가속화,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국채수익률 곡선 구축</li> <li>- 국경간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의 태환성 점진적 개선, 신중한 관리의 틀 속에서의 외채 및 자본 흐름 관리 시스템 구축</li> <li>- 인민폐 자본개정 태환 가속화</li> <li>- 예금보험제도 건립, 금융기구의 퇴출기제 마련</li> </ul>
	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학연 협동 혁신 시스템 구축</li> <li>- 시장 주도형 연구개발</li> <li>- 지식재산권 운용 및 보호 강화</li> <li>- 기술형 중소기업 융자 제도 개선, 리스크 투자 시스템 완비</li> <li>- 인재선발 및 관리체제 개혁, 원사(院士)의 은퇴 및 퇴출 제도 도입</li> </ul>
정부기능 전환 가속화	기본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학적 거시통제, 효율적인 정부 거버넌스 확립</li> <li>- 정부기능의 전환, 행정체제 개혁 심화, 행정관리 방식 혁신</li> <li>- 정부 공신력·집행력 강화, 법치정부·서비스형 정부 건설</li> </ul>
	거시조절 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위주의 거시조절 체계 정비</li> <li>- 전략적 자원개발이나 공공 이익 프로젝트 외에는 정부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함</li> <li>- 발전성과 평가체계 개선: 경제성장 일변도가 아닌, 에너지소모·환경파괴·과잉설비·과잉채무 등을 가중치로 판단</li> <li>- 국가 전체의 경제재산 제도 구축: 전국 및 지방의 대차대조표 편제, 부동산·금융 등 기초 데이터 통일 플랫폼 구축</li> </ul>
	정부 기능의 명확한 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, 행정 심사제도 개혁</li> <li>- 정부의 발전전략, 기획 등 제정과 실시 역할 강화, 시장감독 강화, 공공서비스 강화</li> <li>- 학교, 과학연구소, 병원 등의 행정계급 취소, 사업단위의 법인화</li> </ul>
	정부 조직구조 최적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부제 개혁 적극 추진</li> <li>- 당과 정부의 기구개혁 총괄, 관련부서 직책 관계 조절</li> <li>- 재정 인원 수 통제: 직원 수에 따른 간부인원 수 책정, 기관 수와 임원 수 축소</li> <li>- 지방정부 개혁: 省의 縣(市) 직접 관할하는 행정체계 탐색</li> </ul>
재정·세제 개혁 심화	기본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정비, 사업권 명확화, 세제개혁, 조세부담 안정, 예산투명성, 효율제고, 현대재정제도(現代財政制度) 건립,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 발휘</li> </ul>
	예산관리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산제도의 규범화 및 투명성 제고</li> <li>- 예산 심사의 중점을 균형 지향 및 적자규모 조절에서 지출예산 정책 위주로 전환</li> <li>- 지방에 대한 재정보조(이전지급) 개선: 혁명지구, 민족지구, 변경지구, 빈곤지구 등에 대한 재정보조 확대</li> <li>- 경쟁 영역에 대한 지방재정보조 취소</li> </ul>
	세수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접세 비중 제고, 세율 간소화</li> <li>- 소비세 징수 범위 및 세율 조정: 에너지소모·오염유발·사치품에 중과세</li> <li>- 부동산세의 현실을 고려한 확대</li> <li>- 자원세 개혁, 환경보호세 추진</li> </ul>
	사업권과 지출권한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: 국방·외교·안보·시장관리</li> <li>- 중앙+지방: 일부 사회보장, 범지역 인프라 건설</li> <li>- 지방: 프로젝트 건설, 지역적인 공공 서비스</li> </ul>



경제개혁 방향		주요 개혁 과제
도농 일체화 발전	기본방향	- 도농일체형의 신형 공농도농관계(新型工农城乡关系) 구축 - 농민의 평등한 현대화 참여와 현대화 성과의 공유
	신형 농업경영체제 구축 가속화	- 농촌토지 집체소유권 유지, 절대보호 농경지 엄수 - 가정을 기본적 경영단위로 하되 다양한 집체 합작기업 실험 - 농민에게 토지의 사용·수익·이전·수탁관리·담보권 부여
	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 부여	- 농민에게 집체자산에 대한 지분점유·수익·유상퇴출 및 저당·담보·계승권 부여 - 농촌 택지의 재산권 보호하되 그에 대한 저당·담보·이전은 신중 실시 - 농촌 재산권거래시장 구축
	도농 생산요소간 평등 교환 및 공적자원 균형 배분	- 농민 생산요소 권익 보호, 농민공의 동일업종 동일임금 보장 - 농촌예금은 농촌에 쓰이도록 보장 - 양식(곡물) 생산지 보상 체제 구축, 농업 보험제도 개혁 - 도농 사회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
	도시화 발전체제 시스템 완비	- 도시건설 관리혁신 추진: 도시건설 투·융자시스템 구축 및 규범화 -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- 기초인프라와 주택건설을 위한 정책금융기구 설립 연구 - 탈농업 인구에 대한 조건부 시민화 추진 - 호적제도 개혁 가속화: 소도시 전면개방, 중급도시 점진적 개방, 대도시 정주 조건 합리화, 거대도시 엄격 통제 - 도시정착 농민을 도시주택 및 사회보장체계에 포함 - 중앙의 재정이전 지출을 농민공 시민화와 연결하여 실시
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	기본방향	-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(以開放促改革): 대내개방과 대외개방의 상호 촉진,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결합, 요소의 국내외 자유이동 촉진
	투자 진입제한 완화	- 내외자 법규 통일 - 금융·교육·문화·의료: 점진적 개방 - 유아·양로·건축설계·회계·상업물류·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자진입 완화 - 자유무역시범지역, 자유무역원(항)구 확대 - 기업과 개인의 대외투자 확대 허용 - 외국과의 투자협정 가속화, 해외 투자심사체제 개혁, 해외투자 보호조치 강화(투자보장협정, 영사보호 등)
	FTA 체결 가속화	- 양자간·다자간·지역 및次지역(sub regional) 경제협력 구축 - 시장진입·세관감독·검역 시스템 개혁 -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형성: 환경보호·투자보호·정부조달·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 수용 - 홍콩특별행정구,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개방협조 확대
	내륙·변경 개방 확대	- 내륙 무역·투자·기술혁신 협력발전 추진 - 가공무역 혁신, 내륙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도모 - 내륙 도시의 국제운송선 증설, 다양한 복합운송 발전, 동중서 횡단·남북결합형의 경제회랑 형성 - 변경 중점 세관(口岸), 변경도시, 경제협력구 내 인적 이동, 가공, 물류, 관광 분야에서 특수 정책 전면 실행 - 개발금융기구 설립을 통해 주변국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 추진 -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, 해상 실크로드 건설

자료 : 제18기 3중전회의 「결정」 (2013) 정리.

## 2.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대중 수출과 투자의 기회·위험요인 분석

분야	경제개혁 과제 주요내용	기회요인	위험요인
금융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유상업은행 개혁</li> <li>· 증권시장과 보험업 발전</li> <li>· 농촌 금융개혁</li> <li>· 금융부문 대외개방</li> <li>· 금리자유화</li> <li>· 예금보험제도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금융개방 확대</li> <li>· 금리인하 가능성</li> <li>·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</li> </ul>	
재정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앙-지방 재정관리 체계</li> <li>· 지방정부 채무</li> <li>· 관련 세제 개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재원 확충, 지방 투자 증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정부 채무 악화에 따른 지방 투자 위축</li> </ul>
세제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득세제 개혁</li> <li>· 유통세 개혁</li> <li>· 소비세제 개혁</li> <li>· 재산세제 개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재원 확충</li> <li>· 과세의 투명성 제고</li> <li>· 기업의 영업세 부담 경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</li> <li>· 기업의 환경부담금 증가</li> <li>· 부동산 시장 둔화와 투자 위축</li> </ul>
가격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원가격 개혁</li> <li>· 에너지 가격개혁</li> <li>· 농산물 가격 시장화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원, 에너지 가격 상승</li> </ul>
노동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분배제도 개혁</li> <li>· 노동제도 개혁</li> <li>· 호적제도 개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산층 확대, 소득증대, 수요 증대</li> <li>· 직원 고용의 안정성</li> <li>· 부동산, 문화, 교육, 의료 소비 증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존 대도시 실업 증가</li> <li>· 기업의 복지비용 상승</li> </ul>
국유기업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영화 개혁</li> <li>· 경영관리제도 개혁</li> <li>· 연관제도 개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국기업 M&amp;A 기회 증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</li> </ul>
시장화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독점규제 개혁</li> <li>· 소비자보호제도 개혁</li> <li>· 유통체제 개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정경쟁 여건 조성</li> <li>· 시장의 투명성 제고</li> <li>· 유통 환경 개선, 유통비용 절감</li> <li>· 전자상거래 진출 가능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독과점 규제 강화</li> <li>· 소비자 권익 강화, 소비자 제소 증가</li> </ul>
대외경제 체제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외국인투자</li> <li>· 해외투자</li> <li>· FTA</li> <li>· 환율제도 개혁</li> <li>· 자본항목 자유태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중 투자여건 대폭 개선</li> <li>· 중국의 대한(對韓) 직간접 투자 확대</li> <li>· 높은 수준 한·중 FTA에 유리</li> <li>· 위안화 절상, 수입 증대</li> <li>· 위안화 역외시장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계시장에서 한·중 경쟁 격화</li> <li>· 중국의 한국 자본시장 영향력 증대</li> <li>· 위안화 변동성 확대</li> <li>· 재중 가공무역기업의 경쟁력 악화</li> <li>· 송금 환경 개선</li> </ul>

자료: 필자 작성.